

“광주역 집단발포 3공수 1인당 실탄 60발 들고 왔다”

당시 3공수 장교 “6만여발 중대별로 분배...개인 분배 시점은 잘 몰라” 자위권 아닌 실탄 사격 전제...최세창 공중에 3발 쏘며 사실상 사격 명령 “송암동 계엄군 오인사격은 11공수 잘못...교도소 시신 매장 얘기도 들어”

단독 보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역 첫 집단발포에 앞서 투입된 3공수여단 소속 계엄군 1000여명이 서울에서부터 실탄을 직접 들고 왔다는 3공수여단 지휘관부의 증언이 나왔다. 투입 당시부터 1인당 60발씩 쓸 수 있도록 실탄을 중대별로 분배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계엄군이 투입되면서 최소 6만여 발이 넘는 실탄을 미리 들고 온 것은 자위권 차원의 발포였다는 신

군부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출동 당시부터 실탄을 갖고 내려온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실탄 사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1980년 5월 당시 3공수여단 지휘관부였던 A(70대)씨는 광주일보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개인별로 60발씩 쓸 수 있도록, 중대별로 한 박스에 실탄을 모아 보관을 하고 다녔다”며 “이 실탄은 서울에서부터 탕통째로, 중대별로 분배돼 직접 들고 온 것”이라고 증언했다.

3공수여단은 1980년 5월 20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광주역 앞에서 최초로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 때 최소 5명의 시민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최세창 3공수여단장은 밤 10시 30분께 부대원들에게 실탄을 지급했으며, 밤 11시께 직접 공중에 총 3발을 쏘아 사실상 사격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들이 나온 바 있다.

A씨는 “밤 10시 30분께 3공수여단 11대대의 차량이 와서 전남대에 잠시 보관해뒀던 실탄을 가져와 대대에 보급했다”며 “실탄을 각 대대에 보급한 시점부터 사격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실탄을 개인에게 분배한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을 피했다.

A씨는 3공수여단이 광주교도소에 배치됐을 때, 회의 과정에서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신고 온 시신을 교도소 북쪽 공동묘지 인근에 여덟 구가량을 매장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5월 24일 광주시 남구 송암동 일대에서 계엄군끼리 오인 사격이 발생한 것은 당시 11공수여단 63대대장 조창구 중령의 잘못이 컸다는 지적도 내렸다. 63대대는 당시 장갑차에 탑승해 송암동 효천역 인근을 지나다 보병학교 교도대의 기습 공격을 받아 9명이 숨지고 3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송정리 비행장으로 집결하던 중 11공수부대가 매복 공격을 당해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들었다”며 “원래 대대장은 무장 이동 시 호를 벗긴 지프 차나 트럭을 타야 하는데, 대대장이 난데없이 장갑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군에

게 당하기 싫다면서 굳이 장갑차를 타고 오니 오히려 교도대에게 공격당했다”며 “거기다 대대장이 교신도 없이 엉뚱한 방향으로 커브를 도니 교도대도 확 쏘 버린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계엄군 중에서 5·18 당시 학생 행위를 후회하고 양심고백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반면에 일부 계엄군들은 아직도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루빨리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나와서 5·18의 진상이 명확하게 드러나 광주시민들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로 특전사 선·후배가 태극기부대 등 극우단체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양심고백을 하는 계엄군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계엄군은 가해자’ 연구결과 담은 책 발간 눈길

‘피해자 규정 용서’ 주장과 대조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무참하게 시민들을 학살한 특전사들은 ‘가해자’라는 연구결과를 담은 책이 발간됐다.

최근 일부 5·18 공법단체들이 계엄군을 또 다른 피해자로 규정하고 용서와 화해를 해야한다고 한 것과는 다른 주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광송연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최근 펴낸 ‘오월의 정치사회학(오월의봄 간)’은 ‘가해자’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

곽 연구원은 ‘5·18 가해자들은 어떻게 탄생되었나’라는 주제의 장에서 가해자의 지위와 직책에 따라 분석을 했다.

고위 간부·지도자는 ‘하나로’로 대표되는 정치장교 그룹으로 전두환, 노태우 등 수도권의 주요 사단장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철저한 계급사회인 군인 입에 군 공식 지휘계통보다 파벌 위주의 관계망인 지휘 체계가 우선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전두환이 최고 책임자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곽 연구원은 5·18 당시 광주지역에 투입된 특전사에 집중했다.

그는 특전사는 신군부 장교들의 친위부대 성격과 함께 장기 근속자 위주의 전문화된 특수부대라는 점에서 거ripp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고 봤다.

최소단위가 지대·중대라고 불리는 전문화 된 팀체제로 두명의 장교와 하사관 몇명으로 구성된 집단생활을 통해 혈육과 같은 인간관계로 엮여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명령체계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데올로기 주입에 효과적이며 동료 집단의 압력과 순응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에서 학살을 경험한 점도 자신들의 잔혹한 행위의 합리화 작용을 했다고 봤다.

곽 연구원은 “특전사들은 5·18 당시 잔학한 가해자, 말리지 않는 목격자·방치자, 또는 적극적으로 명령을 거부한 자들이 뒤섞여 있다”면서 “40년동안 구체적 행적도 낱낱히 밝혀진적 없는 이들은 피해자라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가해자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민단체들이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법단체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특전사동지회의 ‘대국민선언서’를 비판하는 ‘광주 선언’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올해도 광주서 왜곡 집회 열겠다는 보수단체들

5·18기념재단 “법적 책임 물을 것”

보수 성향 단체들이 올해도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집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 ‘청교도TV’가 15일에 이어 16일에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에는 보수단체 관계자 20~3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광주에서 김대중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逐邪)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교도TV는 기독교 관련 보수단체로 최근 광주에서 5·18 왜곡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관련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단체 ‘턴라이트’도 오는 17~18일 광주시 서

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일대와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집회 인원은 20여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집회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5·18 왜곡처벌법은 악법이다”는 현수막을 건 차량 집회를 열기도 했다.

자중수 5·18기념재단 기록실실부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정부가 공식 인정된 민주화운동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다”며 “5·18을 왜곡· 폄하하려는 일부 세력에게 5·18특별법을 적용해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동선언문은 역사 왜곡...폐기·사과 촉구”

오월정신지키기대책위·1646개 시민단체 등 ‘광주 선언’ 발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민단체(대책위)를 비롯한 전국 1646개 시민단체와 666명의 개인이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의 ‘공동선언서’는 5·18에 대한 부정적 역사 왜곡”이라며 선언문 폐기와 각 단체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 선언’을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두 공법단체는 공동선언서이란 미명하에 1980년 오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던 계엄군을 피해자라고 말하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며 “또 선언서 당일 참석자들은 광주에서 살육을 ‘질서 유지 임무’라 주장하고, 5·18민주묘지를 군함바로 기습 참배하는 만행마저 저질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43년이 지났지만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단 한명도 진정성 있는 사과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최근 벌어지고 있는 5·18 망언들과 대국민공동선언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지우고 왜곡하려는 커다란 움직임의 일환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광주 선언’을 통해 “공동선언문 폐기 및 사과를 요구하고, 참가자 일동이 대책위 활동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또 “오월 정신과 국민을 위협하는 모든 불의와 모든 영역의 위기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문의. 010-3605-5000